

정치적 이념, 정부신뢰 그리고 정책지지*

금 현 섭**

백 승 주***

< 목 차 >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검토

III. 자료 및 분석모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요 약 >

본 연구는 정부지출(정책)지지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이념적 희생이론(ideological sacrifice theory)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념적 희생이론은 정부지출 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와 이념적 희생의 교환논리를 바탕으로, 정책으로 인해 개인이 받는 이념적 희생에도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높은 신뢰수준에서 찾는다. 시민인식도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실증분석 결과 2009년도와 2010년도 자료에서 보수성향의 집단에서 이념적 희생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정부신뢰에 대한 규범적 중요성과 함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한 과제라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주제어 : 정책선호(지지), 정부신뢰, 희생이론, 물질적 희생, 이념적 희생】

I. 서론

정책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갖는 정부에 대한 신뢰(이하 정부신뢰)는 정책의 안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Dahl, 1956; Pennock, 1979; Miller, 1974)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 결여는 집행과정상의 순응(compliance)을 저해하는 요인(박정훈, 2008)이자 나아

* 이 논문은 2010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습니다.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hyunsk@snu.ac.kr)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과정(qbic30418@snu.ac.kr)

논문접수일(2010.10.25), 게재확정일(2010.12.9)

가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ears & Citrin, 1982). 실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동은 정책과정에서 정부신뢰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논란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 자체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초기 이명박 정부의 정책운영기조를 변화시킬 정도의 저항(촛불집회 등)을 유발하였다. 당시 언론들은 “일관성 없는 대응, 무너진 신뢰”(내일신문, 2008.7.15), “신뢰 못 주는 정치, 촛불로 질타 받아”(동아일보, 2008.6.12) 등으로 이를 지적하였다. 따라서 성공적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자체의 적절한 설계뿐 아니라 그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신뢰에 대한 이해와 그 제고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신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주로 정부신뢰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었는데, 이는 식별된 영향요인에 대한 조정(manipulation)을 통해 정부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도구적 목적에 기초하였다. 더욱이 지난 30년간의 정부신뢰의 감소현상이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점(Nye et al, 1997)은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영향요인 파악에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에 대한 만족정도(Miller, 1974; King, 1997), 정부정책(특히 경제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정도(Stoke, 1962; Citrin & Green, 1986; Sears & Citrin, 1982), 의회와 정치인의 행태에 대한 인식정도(Hibbing & Theiss-Morse, 1995), 그리고 정치적 참여수준(Putnam, 1995) 등은 이러한 연구노력으로 밝혀낸 대표적인 영향요인들이다.

한편, 정부신뢰가 어떤 요인에 의해 그 수준이 결정되는지 보다는 이의 변화로 인하여 어떤 정책적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관심을 두는 시각도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정부신뢰를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attitudes), 선호(preference) 또는 지지(support)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Chanley, 2000; Hetherington & Globetti, 2002; Erikson, Mackuen & Stimson, 2002; 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Rudolph, 2009). 사실 정책에 대한 지지 메커니즘, 즉, 누가(who), 어떤(what) 정책에, 어떤 이유로(why) 특별한 선호 또는 지지를 표출하는지를 파악하려는 노력은 정치학, 행정학의 오랜 관심사이다. 일반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나 지지는 후보자의 공약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일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rosnick, 1988:196, 1991), 이때 지지의 정도는 후보자의 공약이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물질적 이익의 크기나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과 일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상징적 일체감의 크기에 따른다는 연구결과들이 다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는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권자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하고자 하거나(Goggin et al, 1990), 동일한 이념적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에 집중적인 지지호소를 하게 된다(Riggle, 1992:73).

이러한 매커니즘 속에서 정부신뢰의 역할을 강조하는 학자들의 주장은 정부신뢰수준이 다른 전통적인 영향요인들 즉, 물질적 이해관계 또는 이념적 일체감과 구별되는 고유한 영향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시각은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형성하는데 정부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Easton(1975)의 이론과도 연결될 수 있지만 정부신뢰를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요인으로 그 성격을 보려한다는 점에서 구별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연구들에서 주목할 부분은 정부신뢰가 갖는 다른 전통적 영향요인(물질적 이해관계 또는 이념적 일체감)과의 동태적 상호관계이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보수적 이념성향의 개인은 시장의 역할을 중시하고 정부의 소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적 이념성향의 개인은 시장실패에 대해 주목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 해결과 정부기능 확대를 위한 정부지출(정책)에 대해 보수적 이념성향의 개인은 소극적인 지지(또는 반대)를 표출할 것이며, 진보적 이념성향의 개인은 긍정적인 지지를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정책상황에서는 정부지출확대에 보수성향의 개인이 지지를 표현하거나 진보성향의 개인이 반대를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재정지출이 요구되는 복지정책에 대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성향의 집단이 지지를 표출하거나 또는 감세정책에 대해 적극적 정부를 희망하는 진보성향의 집단이 반대를 표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일까? 정책지지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또는 물질적 자기이해에 따라 달리 발생한다는 해석은 환상(illusion)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개별 정책이슈에 따라 각기 다른 영향관계를 갖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 중 하나가 희생이론에 기초한 정부신뢰와 물질적 가치 또는 정부신뢰와 이념적 가치간의 교환논리이다(Hetherington, 2005; Rudolph & Evans, 2005). 즉,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자신의 정치적 이념성향 또는 물질적 이익을 희생하면서도 해당정책에 지지(또는 반대)를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지지(선호)를 설명하는데 있어 이러한 희생이론의 적용 가능성은 우리의 정책현실을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실은 과거와는 달리 정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편익과 비용에 매우 민감한 대상집단(target group)을 갖고 있다. 또한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적 이념의 양분화(이현출, 2005:338)와 이에 따른 (복지)정책지향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밝혀지고 있다(김신영, 2009; 류만희 외, 2009; 이승희 외, 2009). 더욱이 진보적 정부 하에서 친(親)기업정책이, 보수적 정부 하에서 친(親)서민정책과 같은 정치적 이념지향과 정책지향이 상충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여론의 향배 역시 지지와 반대가 혼재하면서 매우 복잡한 부침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적 자기이해나 이념적 성향, 또는 정책의 규범성만으로 정책의 지지여부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신뢰에 대한 이해는 일정부분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정책과정에서 정부신뢰의 중요성은 강조되면서도 그 정도가 어느 만큼이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¹⁾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된 희생이론의 우리 현실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즉, 정책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영향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우리의 정책현실을 설명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찾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정책지지(선호)의 결정요인에 대한 그동안의 논쟁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적 요인으로서 정부신뢰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희생이론에 따른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선호)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실증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1. 정책지지와 정부신뢰

정책지지(support)의 개념은 기존문헌들에서 정책선호(preference), 정책에 대한 태도(attitude) 또는 정치적 지지 (political support)와 혼용되고 있는데(Eismeier, 1982; Sears, 1991; Jacoby, 1994; Gilens, 2001; Hetherington, 2002, Weatherrford, 1987; Easton, 1975),²⁾ 일반적으로 해당 정책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통해 표출하는 호의적 또는 긍정적 태도나 행동으로 정의된다(Ajzen, 1991:180; 박정훈, 2008:97).

정책지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각 개인이 갖는 평가의 기반 또는 근거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크게 합리적 선택에 근거한 물질적 자기이해(material self-interest)요인을 강조하는 입장과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과 같은 상징적 태도(symbolic attitude)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자기이해요인은 개인

1) 국내의 정부신뢰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정부신뢰의 결정요인 파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이시원, 1994; 손호중 외, 2005; 박순애 외, 2006), 정부신뢰의 결과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김현구 외, 2009). 후자의 경우로 박정훈(2008)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간의 관계를 전자주민카드 도입정책 사례를 이용하여, 김대욱 외(2009)는 정부신뢰정도에 따른 투표참여를 정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2) 연구자에 따라서는 정책 지지(policy support) 또는 정책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공태도(public attitudes)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정부 혹은 정책에 대한 지지나 선호여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정책지지 혹은 정책선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의 삶에 있어서 물질적인 행복(material well-be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특별한 태도라고 정의(Sears et al, 1980:671)할 수 있는데, 정책지지에 있어서 자기이해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은 정치적 선택이 시장에서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물질적 이득을 증진할 수 있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³⁾에 기초한다(Citrin et al, 1990; Sears & Citrin, 1982; Green & Gerken, 1989; Dixon, Lowery, Levy, & Ferraro, 1991; Crowe & Bailey, 1995; Wolpert & Gimpel, 1998; Chong et al, 2001).

한편, 정책지지의 결정요인으로 이념적 성향을 나타내는 상징적 태도(symbolic attitude)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상징적 태도가 생애초기에 형성되어 성인기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새롭게 마주하게 된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Eisemeier, 1982; Jacoby, 1994, 2000; Lupia et al, 2007). 물론 상징적 태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⁴⁾ 대체로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정치적 이념(political ideology), 인종편견(racial prejudice)등이 이러한 상징적 태도를 구성하는 중요요소들로 간주된다(Sears et al, 1979, 1980; Jacoby, 1994, 2000). 특히 Sears et al(1980)은 실업정책, 건강보험, 공립학교 통학버스, 범죄라는 문제에 대해 자기이해지수(self-interest index)와 상징적 태도가 정책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에 의하면 자기이해지수는 응답자들의 정책지지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상징적 태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업정책, 건강보험, 통학버스, 범죄예방정책 등에 대해 진보주의자들(liberal)은 보수주의자들(conservative)에 비해 더 높은 지지성향을 보일 뿐 아니라, 민주당(Democratic)과 정당일체감을 보이는 사람들에 있어서 그 지지정도는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책지지에 대한 물질적 자기이해와 상징적 태도(특히 정치적 이념)의 영향관계는 많은 실증연구를 통하여 입증되고 있지만 그 관계의 양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연구들에 있어서 물질적 자기이해 또는 상징적 태도의 독립적인 선형관계를 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에 대한 개념, 측정, 추정모형 및 추정방법에 따라 그 특

3) 예를 들어 Sears & Citrin(1982)은 1978년에 있었던 미국 California의 재산세인하에 관한 주민발의 13호(Proposition 13)에 대한 투표결과가 자기주택소유(self-owned)여부와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주택소유자들이 해당 발의가 자신들에게 크고, 직접적이며, 지속적인 재정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4) Sears(1983)는 정치적 태도를 가장 상징적인 태도에서부터 비상징적인 태도로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태도부터 나열하면 1) 정당 일체감(political party identification), 2) 진보-보수 정치이념(liberal-conservative ideology orientation), 3) 사회집단에 대한 태도(attitudes towards social groups), 4)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태도 (attitudes on racial policy issues), 5) 비인종적 정책에 대한 태도 (attitudes on nonracial policy issues), 6) 정치적 효율성과 정부신뢰를 고려한 태도 (attitudes regarding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in government).

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음은 이를 반영한다. 실제 자기이해와 상징적 태도의 효과가 모든 정책영역에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집단들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정 정책영역에 있어서는 자기이해 요인이, 어떤 집단에 있어서는 상징적 태도 요인이 보다 강력하게 또는 보다 약화된 양상의 영향관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관계의 양상은 크게 (1) 어떤 조건에서, (2) 자기이해와 상징적 태도 중 어떤 요인이, 그리고 (3)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분석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실제 그 관계를 살펴보는데 상호 배타적일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역할이 두드러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책지지의 결정요인으로서 정부신뢰의 역할에 주목하는 입장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경향이다. 정부신뢰에 대한 개념은 대체로 윤리적 측면과 국민의 기대에 대한 부응정도라는 측면에서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Miller(1974b:989)는 정부신뢰를 “시민의 규범적 기대에 따라 정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념”으로 보는 반면, Heatherington(1998:792)은 성과와 연계하여 “정부의 산출물에 대한 혹은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반응하고, 부응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정의한다. 한편, Stokes(1962:63)는 시민들의 규범적인 정부활동에 대한 기대에 근거를 둔 일반적인 정부에 대한 지향(orientation)으로 정의하며 정부관료의 효율성과 능력, 잘못된 결정에 대한 수정 등을 포함해서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정부신뢰 개념의 다양성은 결국 그 측정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들을 유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Miller, 1974; Citrin, 1974; Nye et al, 1997; Hibbling & Theiss-Morse, 2001).⁵⁾

최근 들어 이러한 정부신뢰의 개념과 형성에 대한 관심보다 정책과정에서 정부신뢰의 독립적 역할을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크게 증가하였는데(Chanley, 2000; Hetherington & Globetti, 2002; Erikson, Mackuen & Stimson, 2002; Hetherington, 2005), 정부신뢰를 정치적 지지 중 분산된 지지의 하위 구성요소⁶⁾ 또는 구체적 정책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해당정책을 지지할 수 있게 하는 정부에 대한 보편적 인상(Heatherington, 2002:254)으로 간주하거나, 투표와 같은 정치참여를 증진시키며(Almond & Verba, 1963), 정부정책에 대한 순응을 확보하고(Scholz, 1996), 나아가 특정집단이 정부에 대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들이 그 예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의

5) 이승중(2010)은 구조적 관점에서 정치행정적 요인과 개인적 관점에서 사회심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정부신뢰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으며, Miller(1974)는 정책결과에 대한 불만족을, Citrin(1974)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정부신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6) Easton(1975)은 정치체제에 대한 지지를 특정한 지지(specific support)와 분산된 지지(diffuse support)로 구분하면서, 특정한 지지는 정부정책과 정부기관에 대한 성과에 대한 만족도로, 분산된 지지는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태도로 정의하고 있다(배귀희, 2009 재인용).

중요한 의의는 기존의 물질적 자기이해나 상징적 정치이념과는 구별되는 정부신뢰 자체의 정책지지(선호)에 대한 영향력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2. 정부신뢰와 희생(sacrifice)

정책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희생이론(sacrificed-based theory)이다. Hetherington(2005)은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의 관계에 있어서 정책유형에 따라 인지된 물질적 희생(perceived material sacrifice)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때 인지된 물질적 희생이란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비용(세금)이 물질적 편익(서비스)에 비해 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정책지지를 표방할 수 있게끔 하는 용의(willingness)를 의미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정책유형에 따라 비용과 편익의 귀착범위와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에 따라 개인들은 일정부분 편익보다 비용이 큰 상황 즉, 희생을 부담할 수 있고, 이때 이러한 희생을 부담하고자 하는 성향은 바로 개인이 갖고 있는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배분정책은 비용과 편익이 넓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부서비스의 증가는 넓은 수혜집단에게 비용과 혜택을 부여하는 반면, 재분배정책의 경우 비용은 넓게 분산되지만 편익은 좁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Wilson,1995). 따라서 재분배정책을 지지하는 경우 다수의 비용부담으로 소수만이 수혜집단이 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다수는 물질적 희생을 부담하게 되는 반면, 배분정책을 지지하는 경우 다수의 비용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비대칭적 물질적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개인 수준에서 자기이해와 관련한 정책지지가 이루어지는 경우 배분정책과는 달리 재분배정책에 대한 다수의 지지, 즉 물질적 편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보다 많은 수의 지지는 자신의 물질적 희생을 감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희생을 가능하게끔 하는 역할을 정부신뢰 수준이 담당하게 된다고 본다. 즉, 정부신뢰가 높은 경우 자신의 이해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Hetherington(2005)은 이러한 논리에 대한 증거로 두 가지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제도, 범죄예방, 환경보호, 국방정책과 같은 배분정책의 지출증가에 있어서 정부신뢰에 따른 정책지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복지정책, 푸드스탬프(food stamp), 아동보호정책, 공립학교, 보건 의료, 외국인조정정책, 빈민구제정책과 같은 재분배정책의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정부신뢰의 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해당정책으로 인해 인지된 희생이 큰 집단(비수혜집단 또는 비용부담집단)에서 정부신뢰에 의한 희생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재분배정책의 수

혜집단에게는 정부신뢰의 정도가 정책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재분배정책의 비용부담집단의 경우 정부신뢰가 높은 집단으로부터 해당정책에 대한 지지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희생에 근거한 정책지지의 논리는 물질적 희생에 국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Rudolph(2005, 2009)는 정부신뢰와 정책지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앞에서 살펴본 물질적 희생과 대비되는 이념적 희생(ideological sacrifice)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념적 희생은 해당 정책의 이념적 지향과 개인이 갖고 있는 이념성향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지를 표명할 때 발생하는 희생을 의미한다(Sears et al, 1980; Huckfeldt et al, 1999; Lupia et al, 2007).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정치적 이념은 다양한 정책에 대한 지출선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보수적(conservatives)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적(liberals) 이념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정부지출증가에 부정적이다⁷⁾. 이러한 현상은 미국적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연방정부를 개인과 주(state)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며 그 역할의 제한을 강조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들은 대체로 사회·경제적 평등의 증진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의 증가를 지지한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보수주의자들이 정부지출의 증액에 지지를 표출한다면 이는 그들의 핵심적인 이념적 가치(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와는 대치되는 것인 반면 감세정책 혹은 상속세 폐지와 같은 정책에 대해 진보주의자들이 지지를 한다면 이는 그들의 핵심적 이념적 가치(사회·경제적 평등 증진 등)에 대한 희생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개인들이 부담하는 희생은 앞에서 살펴본 물질적 희생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이념적 희생이며 이를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정부신뢰의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념적 희생의 논리는 비용과 편익의 범위와 크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물질적 희생과는 사뭇 다르다. 이 경우 정책(정부활동)의 성격과 개인이 갖는 정치적 이념성향(정부역할에 대한 기대)간의 차이에 따라 희생의 발생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다. 실제 관련한 해외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기능의 확대를 위한 지출 증가에 대한 정부신뢰의 효과는 정책유형(재분배정책과 배분정책)에 상관없이 이념적 희생이 요구되는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주로 나타나며⁸⁾, 반대로 정부간섭의 축소를 위한 감세정책의 경우에는 보다 큰 이념

7) 이승종 외(2006)은 한국에서의 정책결정자의 정책지지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입장 차이에 대한 설명에서 진보의 경우 복지국가강화, 재정규모의 확대, 분배우선주의의 입장을, 보수의 경우 복지국가의 축소, 재정규모의 축소, 성장우선주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Rudolph et al(2005)등이 구분한 conservatives와 liberals의 연방정부에 대한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liberals을 “진보주의자”로 conservatives를 “보수주의자”로 보고자 한다.

8) Rudolph(2005)의 경험적 연구는 사회보장, 환경, 노인의료보험, 국방정책과 같은 분배정책과 교육, 의료서비스, 저소득층 의료보험, 저소득층 모자녀지원 정책등과 같은 재분배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와 정

적 희생을 요구하는 진보주의자에게서 정부신뢰의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Rudolph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러한 이념적 성향의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지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정부신뢰의 역할여부에 대한 실증적 근거이다. 과연 정부기능의 확대와 지출증가에 대해 시장을 강조하고 정부간섭의 축소를 지향하는 보수성향의 개인들이 지지를 표명할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 그들이 갖는 정부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그 지지수준은 어느 정도나 될지를 최근에 실시된 서베이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Ⅲ. 자료 및 분석모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책지식센터와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공분야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이하 시민인식도 조사)를 사용하였다. 시민인식도 조사는 행정서비스 및 공공정책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사회현상 및 정책, 언론분야, 정치 분야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 약 1,200명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매년 묻고 있다.

시민인식도조사 자료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연구에 장점이 있는데, 먼저 조사의 내용이 매년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물론 매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나, 주요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시민들의 정부정책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평가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지지, 정부신뢰정도, 정치적 이념성 정도에 관한 문항을 모두 포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연구들이 주로 기반하고 있는 NAES(National Annenberg Election Survey)나 NES(National Election Studies)와 유사한 질문 형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된 문항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⁹⁾

그 중 2007년, 2009년, 2010년의 자료를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

부신뢰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 정책유형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정부지출의 증대를 반대하고 따라서 이념적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 보수주의자들에 있어서 정부신뢰의 정책지지에 대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9) <http://www.electionstudies.org/studypages/2002prepost/2002prepost.htm>

은 고려 때문이다. 먼저 2007년도 조사 자료와 2009년 조사 자료는 조사당시의 정치적 환경이 매우 상이하다. 즉, 10년간의 진보적 정권에서 보수적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자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환경변화에 따른 관심변수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도 조사의 경우 설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기존의 설문에서는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정도를 “각(정책별로) 정부정책을 시행하는데 정부가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있는 것에 비해, 2010년도 조사에서는 각 설문에 “예산의 증액은 세금인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제약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응답자들이 인지하는 정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한 후, 정책지지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즉 2009년도 자료와 2010년도 자료의 비교는 Bartel(1996, 2005) 등이 강조하는 응답자들의 인지된 정보차이에 따른 정책지지 정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책지지의 정도는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 수준을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⁰⁾ 이는 해당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해당정책에 대한 정부지출증대를 지지할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조사에서는 개별 정책에 대한 정부예산을 삭감 혹은 증액해야 하는지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묻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7, 2009, 2010년도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0개 정책영역(<표 1>참조)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였다.

정부신뢰정도는 그 측정방법 자체가 주요 관심사로 그 동안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왔다. 예를 들어, 정부신뢰를 외부신뢰와 내부신뢰로 분리하여 측정하거나(김현구 외, 2009), 기관신뢰와 대인신뢰를 합산하여 사용하거나(김대욱 외, 2009) 혹은 정부공정성, 투명성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신뢰의 개념적 측정요소들을 이용하여 통합적인 신뢰정도를 측정(박순애, 2006; 오경민 외, 2002)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를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지향으로서 규범적 기대와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한 시민들이 갖는 태도(Heatherington, 2005; Stokes, 1962; Coleman, 1990)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설문을 통해 묻고 있는 대인신뢰(대통령, 고위관료, 시장군수)의 수준과 기관신뢰(중앙행정부처, 지방행정부처)의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사용하였다.

정치적 이념성향은 응답자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는 진보적 또는 보수적 정치성향 정도를

10) 물론 정책지지의 대상이 정부지출확대인지 또는 축소인지에 따라, 해당 정책영역이 배분, 재분배, 대외정책 중 어떤 영역인지에 따라, 그리고 희생의 대상이 이념적인지 또는 물질적인지에 따라 그 선호 또는 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역할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부지출확대에 대한 지지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용하였다.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보수적인지 혹은 진보적인지 여부를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묻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지출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먼저, 정부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는 정부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hodebeck, 1993). 조사에서는 10개의 정책영역에 대한 정부정책의 성공과 실패정도에 대해 응답자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질문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였다¹¹⁾.

<표 1> 주요변수의 측정

변수	측정	구성요소
지출선호	정책영역별로 표준화 후 합산	외교·안보·통일정책, 교육정책,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부동산정책, 문화예술정책, 노동정책,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정부신뢰도	정책영역별로 표준화 후 합산	대통령, 고위관료, 시장/군수 중앙행정부처, 지방행정부처(시군구청)
정치이념	(0) ↔ (1)	진보적 정치이념(1), 그 외(0) 보수적 정치이념(1), 그 외(0)
정부성과 평가	정책영역별로 표준화 후 합산	빈부격차감소, 지역갈등해소, 법질서유지 고용기회확대, 노사갈등해소, 기업규제완화 대북정책, 과세공정성 확보 여성고용확대, 부정부패방지
사회문제 책임도	정책영역별로 표준화 후 합산	빈곤, 소득양극화, 노후생활보장 개인의 의료비용, 자녀양육
정부정책 이해도	정책영역별로 표준화 후 합산	외교·안보·통일정책, 교육정책, 보건의료정책, 복지정책, 환경정책, 부동산정책, 문화예술정책, 노동정책, 경제정책, 과학기술정책, 조세정책
교육수준	(1)점 ↔ (5)점	(1) 초등졸이하, (2) 중졸, (3) 고졸 (4) 전문대졸, (5) 대졸이상
소득수준	(1)점 ↔ (10)점	(1) 99만원이하 (2) 100~149만원 …… (9) 450~499만원 (10) 500만원 이상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는 정부역할범위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이 역시 정부지출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Huseby(1998)에 의하면 정부지출에 대한 태도는 정부개입 정도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정부역할을 강조하는 경우 정부개입을 위한 정부지출의 증대에 관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인식도조사에

11) 2009년도의 조사자료에서는 정부성과평가에 대한 설문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서는 빈곤, 소득양극화와 같은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있는지를 5점 척도로 묻고 있는데, 개인보다는 정부에 있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정부지출에 대해 보다 긍정적 태도를 갖는다고 예상할 수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정도 역시 정책지지를 결정하는 중요요인으로 간주된다. Bartels (2005)은 미국 부시행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결과를 예로 들면서 정부정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자기이익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잘못된 선호가 표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이 자기이해과 정책을 연계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 정보(political information), 즉 정책에 대한 이해정도가 정책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0개 정책영역에 대한 정부정책의 이해도 정도를 활용하였다.

〈표 2〉 주요변수들의 기초통계량(표준화 이전 원점수)

구분	2007년 (N=1,215)		2008년 (N=913)		2009년 (N=1,212)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평균(SD)	최소, 최대
지출선호	33.70 (5.69)	10,50	33.55 (5.48)	10,50	33.72 (4.73)	10,50
정부신뢰도	12.37 (3.06)	5,22	12.31 (3.17)	5,24	13.23 (3.01)	5,21
진보적 정치이념	0.25 (0.44)	0,1	0.24 (0.43)	0,1	0.28 (0.45)	0,1
보수적 정치이념	0.29 (0.45)	0,1	0.28 (0.45)	0,1	0.26 (0.44)	0,1
정부성과평가	24.28 (5.59)	10,42	23.47 (5.29)	10,38		
사회문제책임도	17.02 (3.25)	5,25	17.09 (2.88)	5,25	16.38 (2.94)	5,25
정부정책이해도	25.89 (7.57)	10,50	26.60 (7.15)	10,50	28.54 (6.97)	10,50
연령	40.97 (13.08)	19,76	40.94 (13.35)	19,77	43.62 (14.42)	19,80
교육수준	3.37 (1.12)	1,5	3.47 (1.11)	1,5	3.32 (1.15)	1,5
가구소득	5.20 (2.41)	1,10	5.2 (2.44)	1,10	5.25 (2.51)	1,10
성별	0.49 (0.50)	0,1	0.49 (0.5)	0,1	0.51 (0.50)	0,1

주의할 점은 앞서 살펴본 지출선호, 정부신뢰도, 정부성과평가, 사회문제책임도, 정부정책이해도 등 5개의 변수는 여러 개의 하위 정책 혹은 구성개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각 구성개

념들에 대한 평가정도(분포)가 모두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포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합산 내지 평균을 구하여 쓰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상이한 분포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차별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각 구성개념들에 대한 평가 점수를 표준화한 후 합산하여 단일한 측정지표를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일종의 자기이해에 대한 측정지표들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Achen, 1992). 예를 들어 연령의 경우 정책영역에 상관없이 연령이 많을수록 낮은 지출선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Eismeier, 1982), 이는 그들이 일반적으로 지출증대의 원천이 되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의 경우 보육과 교육정책 등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들에 비해 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지출증대에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Rudolph, 2005). 한편, 가구소득의 경우 정부지출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있으나(Evans, 1992), 대체적으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세금부담의 가능성은 높은 반면 정부정책의 필요성을 낮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출선호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Sears, 1980; Eismeier, 1982). 교육수준의 경우 어떤 정책에 대한 선호인지에 따라 그 영향력에 대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Elliott et al., 1997).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적인 요인이 지출선호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지역에 따른 지지정당의 차이가 있고, 정당에 따른 정책지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역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였다. 지금까지 설명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측정방법은 <표 1>에, 기초통계량은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3. 분석모형

본 연구의 분석전략은 정부신뢰의 직접적인 효과를 가정하면서도,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이념적 희생(비용)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부신뢰와 정치적 이념정도간의 교호작용(interaction)항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 만약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들이 정부지출에 대해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호작용항의 추정계수가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이념적 희생(비용)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그 활용에 약간의 주의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어느 한 변수의 효과가 다른 변수에 의해 조건(contingent)지워지는 경우 개별 추정회귀계수와 해당 표준오차만으로 그 효과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별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즉,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정부지출지지에 대한 정부신뢰의 한

계효과(marginal effects)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신뢰와 교호항(정부신뢰*정치이념)의 개별 추정회귀계수뿐 아니라 이들의 선형조합(Linear combination)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의 두 식을 비교해 보자.

$$(1) Y = \alpha + \omega_1 X + \omega_2 Z + \gamma M + \epsilon$$

$$(2) Y = \alpha + \beta_1 X + \beta_2 Z + \beta_3 XZ + \gamma M + \epsilon$$

식 (1)은 일반적인 선형모형으로 교호항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식 (2)는 동일한 선형모형이지만 교호항을 포함한 경우로 본 연구의 기본모형이다. 이때 각 식에서 변수 X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frac{\delta Y}{\delta X} = \omega_1$$

$$(4) \frac{\delta Y}{\delta X} = \beta_1 + \beta_3 Z$$

만약 변수 X를 정부신뢰라고 한다면, 교호항이 없는 경우의 정부신뢰의 한계효과는 식 (3)과 같이 추정회귀계수 자체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 통계적 유의미성 역시 추정회귀계수의 표준오차(S.E.)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반면, 교호항이 있는 경우의 정부신뢰의 한계효과는 식(4)와 같이 정부신뢰 자체의 추정회귀계수와 함께 특정이념(여기서는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이 갖는 추가적인 정부신뢰의 효과(교호항이 내포)를 포함한 $\{\beta_1 + \beta_3 * \text{보수성향}\}$ 을 통하여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때, 보수성향의 측정을 연속(continuous) 척도로 측정한 경우 정부신뢰의 한계효과는 보수성향의 정도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비선형적(non-linear) 영향력으로 추정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보수성향의 측정이 이항척도(binary indicator)로 이루어진 경우 정부신뢰의 한계효과는 보수성향 여부에 따른 부가적(additive) 영향력으로 추정될 수 있다. 또한 그 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개별 추정회귀계수가 갖는 표준오차와 함께 두 추정회귀계수의 공분산($cov(\beta_1, \beta_3)$)을 이용해 다음과 같이 새롭게 추정된 표준오차가 필요하다.

$$(5) S.E. = [var(\beta_1) + Z^2 var(\beta_3) + 2Zcov(\beta_1, \beta_3)]^{\frac{1}{2}}$$

이때 식(4)를 통해 추정된 정부신뢰의 한계효과가 식(5)를 이용해 새롭게 계산된 표준오차에 비해 대략 2배 이상 큰 경우 정부신뢰의 효과는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추정을 조사년도별로 반복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이는 2007년과 2009년의 조사시점이 지배정권의 정책기조가 서로 상이하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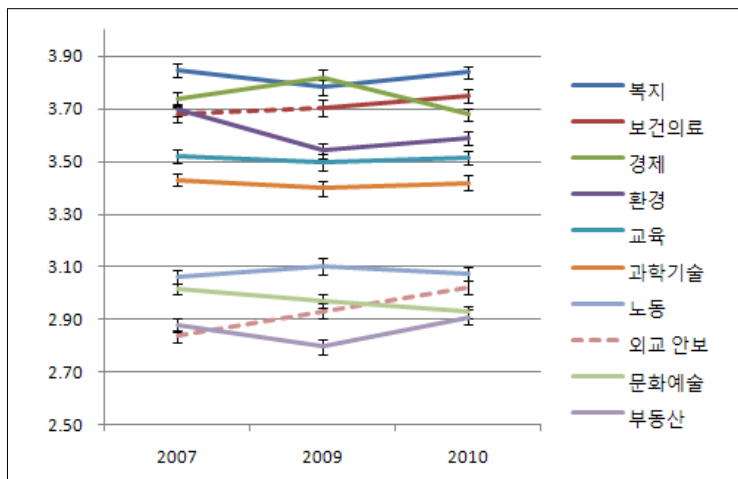
문에 지출선호의 결정요인으로서 정치적 이념과 정부신뢰의 역할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며,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세금비용에 대한 인지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IV. 분석결과

1. 정책지지, 이념성향, 그리고 정부신뢰

먼저 개별정책에 대한 연도별 정책(지출)지지의 변화는 <그림 1>에 나타나있다. 외교안보 정책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만 작지만 지속적인(monotonic)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 증가를 보일 뿐 나머지 8개 영역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¹²⁾. 유의할 점은

<그림 1> 정책별 정책(지출)지지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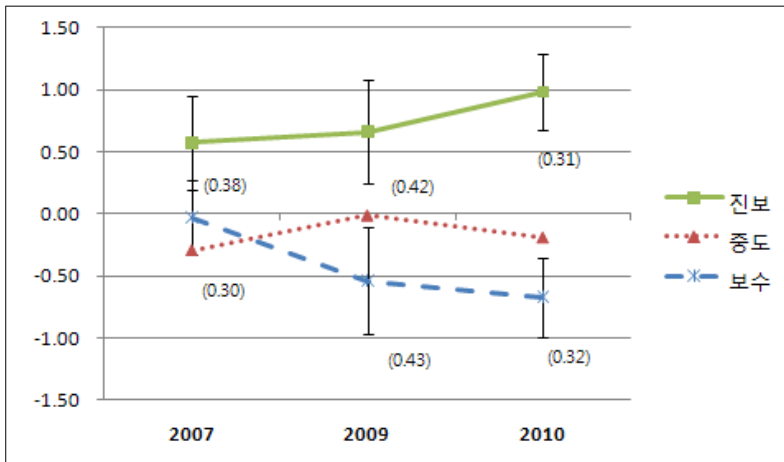
12) 정부지출에 대한 증액선호는 본 연구의 자료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의 다른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07년도 조사 자료에 의하면 환경(70.1%), 보건의료(64.9%), 치안(60.7%), 교육(51.7%), 국방(32.0%), 노령연금(60.5%), 실업급여(40.8%)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서성아, 2007) 또한 한국복지패널의 2007년도 복지 인식부가 조사 자료에 의하면 환경(56.7%), 건강 보험 및 보건(52.3%), 국민연금(45.5%), 교육(58.5%), 주거지원(53%), 국방(26.6%), 치안(49.8%), 빈곤층생활지원(75.1%), 노인생활지원(82.1%), 장애인(82.3%), 양육(66.7%), 실업대책(55.7%)로 문화예술(22.4%)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정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한국복지패널,2007)

지출지지의 수준에 있어서 8개의 정책영역이 크게 두 집단(cluster)으로 나뉘고 있다는 점이 다. 즉 복지, 보건의료, 경제, 교육,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출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노동, 외교안보, 문화예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출지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Jacoby(1994)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정부지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복지 관련 정책과 그 외의 정책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전자의 경우 상당히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면서 낮은 변동성을 갖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 정책별로 매우 다양하면서도 서로 독립된 지출선호를 갖는다고 한다. 시민인식도조사에서 나타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수준이 복지 관련 정책과 그 이외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복지 관련 이외의 정책에 있어서도 그 변동성은 높지 않고, 일관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립적이라는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정도를 비교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도별로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는 응답자들에 비해 진보적 정치성향을 갖는 응답자들이 정부지출에 대해 더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 차이도 점점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즉,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보수성향집단과 진보성향집단간의 정책(지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0.60, $t=1.26$),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과 2010년도 자료에서는 그 차이가 각각 1.2 ($t=1.99$), 1.65 ($t=3.67$)로 신뢰수준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의 연구(Sears et al, 1980; Eismeier, 1982; Jacoby, 1994)와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에 있어 이념적 성향이 중요한 설명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 아니

<그림 2> 연도별 이념성향에 따른 정책(지출)지지의 변화



라 과거 진보정권으로부터 보수정권으로의 변화 속에서 그 경향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른 정부신뢰수준의 변화는 <표 3>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2007년에는 진보성향의 집단이 갖는 정부신뢰수준은 보수성향의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만큼 높는데 반해,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보수성향의 집단이 진보성향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의 경우 그 차이는 2009년에 비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과 개인의 정치적 이념성향이 일치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는 증가한다는 Rudolph et al.(2005)의 주장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정 부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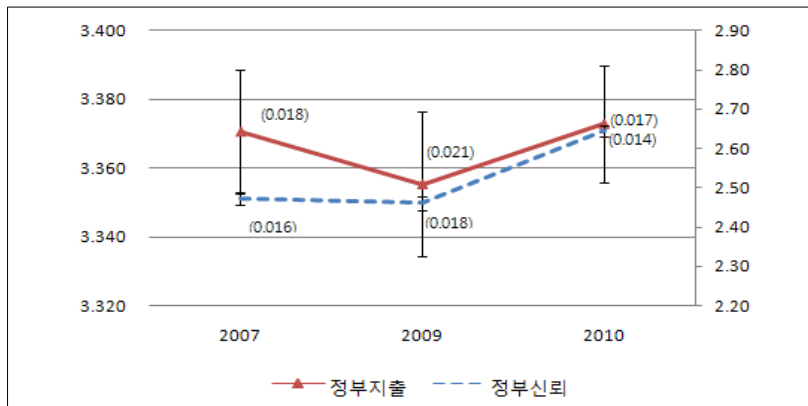
<표 3> 연도별 이념성향에 따른 정부신뢰의 차이

	보수	진보	t값
2007	-0.36 (3.60)	0.22 (3.64)	-2.06**
2009	0.49 (3.54)	-0.26 (3.61)	2.26**
2010	0.50 (3.76)	-0.66 (3.65)	3.99***

* p<0.1, ** p<0.05, *** p<0.01 (괄호)안은 표준오차

한편, <그림 3>은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수준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조사된 10개의 정책영역에 대한 정책(지출)지지정도의 평균과 5개 부분의 정부신뢰정도에 대한 평균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정책(지출)지지의 수준은 평균적으로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의 증액선호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신뢰의 정도는 3점 이하의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그림 3>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의 변화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조사 기간 동안 정책(지출)지지의 수준은 2007년에 비해 2009년은 감소하였지만 2010년에는 다시 종전수준으로 회복하는데 그쳤지만 정부신뢰 수준은 2010년의 경우 그 이전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사기간 동안의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간의 상관관계는 각각 0.17(2007년), 0.09(2009년), 그리고 0.01(2010년)로 그 선형성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정부지출과 정부신뢰간의 상관관계를 정치적 이념성향집단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매우 상이한 점을 알 수 있다. 즉 보수성향의 집단에서는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의 상관관계가 3개년에 걸쳐 각각 0.16, 0.29, 그리고 0.15로 모두 양(+)의 방향이면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진보성향의 집단에서는 각각 0.23, 0.02, 그리고 -0.04로 진보적 정권하(2007년)에서는 그 상관성이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데 반해, 보수정권하(2009년과 2010년)에서는 그 유의미성을 잃었을 뿐 아니라 급기야 부(-)의 상관관계(2010년)를 보였다. 따라서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와의 관계는 보수성향의 집단에 있어서는 일정수준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있으나 진보성향의 집단에서는 그러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지출)지지와 정부신뢰 그리고 정치적 이념성향간의 이변량관계(bivariate relationship)를 간략히 요약해 보면,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 보수성향의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들의 정부신뢰수준은 정권기조와 동향성(co-direction)을 보이며, 정부신뢰도와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 정도는 이들 집단에서만 식별할만한(noticeable)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는 점은 보수성향의 집단은 정부지출 증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도를 갖고 있는 경우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이념적 성향의 동태적 관계에 따라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정부지출 증가에 대한 정치적 이념성향의 효과가 정부신뢰 수준에 의해 변화한다면 또는 정부신뢰의 효과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면 이는 앞서 논의한 이념적 희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보수적 그리고 진보적 정치성향과 정부신뢰간의 교호항(interaction term)을 포함한 다중회귀모형(multiple regression model)을 구성하였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념적 희생은 보수성향의 집단과의 교호항에서만 유의미(significant)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보수적 성향의 집단은 정부지출증가에 부정적이지만, 정부신뢰로 인해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지출증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진보성향의 집단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부지출증가에 긍정적이어서 이념적 희생을 부담할 여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지출의 증가가 아니라 감세정책에 대한 지지여부의 경우라면 정부지출증가와 반대로 진보성향 집단의 이념적 희생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영향력이 추정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민인식도조

〈표 4〉 이념비용과 정부신뢰가 지출선호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출선호	2007년	2009년	2010년
정부신뢰도	0.219*** (0.079)	0.064 (0.094)	0.007 (0.071)
진보적	0.424 (0.430)	0.308 (0.502)	0.614 (0.395)
보수적	0.901** (0.417)	-0.456 (0.484)	-0.373 (0.398)
정부신뢰*진보	0.105 (0.120)	0.099 (0.141)	-0.058 (0.108)
정부신뢰*보수	0.000 (0.116)	0.534*** (0.138)	0.220** (0.107)
정부성과평가	0.060* (0.032)	-0.097** (0.039)	
사회문제책임도	0.248*** (0.052)	0.022 (0.064)	0.115** (0.048)
정책이해도	0.156*** (0.023)	0.156*** (0.028)	0.123*** (0.024)
연령	-0.050*** (0.015)	-0.042** (0.017)	-0.025* (0.013)
교육수준	-0.059 (0.183)	0.361* (0.207)	0.298* (0.170)
가구소득	0.235*** (0.078)	-0.135 (0.088)	0.066 (0.069)
성별	-0.123 (0.355)	-0.055 (0.402)	-0.265 (0.331)
충청	-0.365 (0.603)	-0.837 (0.703)	0.260 (0.503)
호남	0.081 (0.595)	1.642** (0.690)	-0.556 (0.497)
경상	-1.256*** (0.411)	0.039 (0.486)	-0.629 (0.394)
절편	1.085 (1.095)	1.105 (1.226)	-0.006 (1.082)
N	1208	900	1203
R-sq	0.120	0.097	0.074
adj. R-sq	0.109	0.082	0.063

* (괄호)은 표준오차 크기

* p<0.1, ** p<0.05, *** p<0.01

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설문이 없어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표 4>는 다중회귀모형의 추정결과이다. 먼저 진보정권이 집권하고 있던 2007년의 경우 다른 관련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정부신뢰는 예측한 바와 같이 정책(지출)지지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수성향의 집단이 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책(지출)지지를 보이는 다소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신뢰와 정치성향간의 교호항의 경우 예측한 바와 같은 주목할 만한 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진보성향의 집단이 정부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부지출증가에 대해 좀 더 지지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 유의미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다.

한편,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경우 정부신뢰수준은 정부지출 지지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수성향의 응답자들은 중립을 표방한 응답자들에 비해 정부지출에 대해 낮은 지지정도를 보였지만 두 추정계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정부신뢰와 보수성향간의 교호항에 대한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정부신뢰와 진보성향간의 교호항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보수성향의 집단이 정부지출증가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립성향의 집단과 유사한 수준의 낮은 지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신뢰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정도가 높아지는, 즉 자신들의 보수적인 이념적 원칙(정부역할의 축소, 정부지출의 감소 등)의 희생(비용부담)을 감수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지출증대에 대한 지지에 있어서 발생하는 이념적 희생의 간극을 정부신뢰가 채워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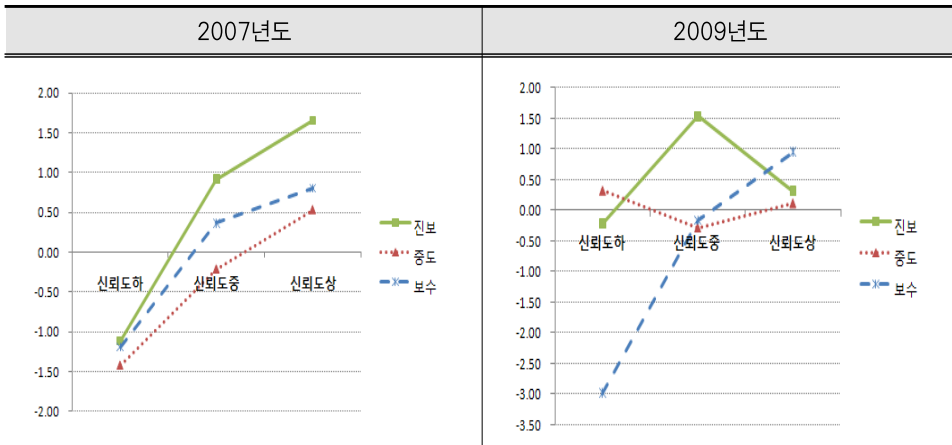
한편,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교호항으로 인한 부가적(additive) 효과를 고려했을 때, 추정된 보수성향의 집단이 갖는 정부신뢰의 한계효과와 표준오차는 2009년의 경우 0.60 (s.e.=0.114, t=5.26), 그리고 2010년의 경우 0.227(s.e.=0.084, t=2.70)로 각각 나타났다. 이때, 2009년에 비해 2010년의 경우 그 크기가 작은 이유를 2010년도 설문이 정부지출증가가 세 금인상을 유발한다는 정보를 사전 제공함에 따라 나타난 희생크기의 감소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명박 정부초기의 정권교체에 따른 강한 보수성향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소 완화되어 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러한 이념적 희생이 2007년

13) 지면제약상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추가적인 분석으로 10개의 개별 정책에 대한 모형을 추정해 보았을 때에도 정부신뢰와 보수성향간의 교호항에서는 유의미한 값들이 많이 발견되는 반면 정부신뢰와 진보성향간의 교호항은 그렇지 못했다. 또한 이러한 발견도 2009년과 2010년에 집중되었다. 또한 독립변수간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은 검토 결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독립변수간의 단순 상관회귀계수값도 매우 낮은 편이었고, VIF는 물론 개별 독립변수를 여타 독립변수들에 대해 회귀시킨 경우에도 그 결정계수가 0.1-0.3 수준에 그쳤다.

자료(진보정권)에서의 개별 회귀계수에서는 나타나지 않아 정부신뢰의 형성에 있어 정권기조(또는 정권의 성격)와의 동향성 정도를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림 4>는 위에서 살펴본 회귀모형의 추정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즉, 정부신뢰도와 추정된 정책(지출)지지(predicted value)간의 관계를 이념성향별로 나누어 표현하였다. 2007년의 경우 전체적으로 정부신뢰가 증가하면서 정책(지출)지지 수준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성향으로 인한 특이성은 살펴볼 수 없다. 그러나 2009년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상이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수성향의 집단에서는 정부신뢰의 정도에 따라 정부지출에 대한 지지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즉, 2007년과는 달리 2009년에는 보수성향의 집단은 정부신뢰가 낮은 경우 명확하게 정부지출의 증가를 지지하지 않지만 정부신뢰가 증가함에 따라 감축지향에서 증액지향으로 가파르게 선호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정부신뢰가 이념적 희생을 극복할 수 있는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성향의 집단에서는 이와 같은 일관된 경향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그림 4> 정부신뢰와 이념성향에 따라 예측된 정책(지출)지지수준의 변화



한편, 분석에 포함된 여타 통제변수들에 대한 추정계수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연령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일관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출증가에 대한 선호가 낮아지고 있으며(Eismeier,1982; Hetherington,2005; Rodolph,2005), 교육수준이 높을수록(Elliott et al,1997), 그리고 정부의 사회문제책임정도(Huseby,1998)를 높게 인식할수록 지출증가에 지지하는 경향이 높아 이 역시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하

지만 가구소득과 지역변수의 경우 다소 일관성 있는(consistent) 결론을 추정하기 곤란하여, 이 역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¹⁴⁾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에서는 정부신뢰와 정치적 이념성향이 정책지지 미치는 영향을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이념적 희생이론(ideological sacrifice theory)에 기초하여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그동안의 정부신뢰의 중요성에 대한 규범적 판단과는 구별하여 정부신뢰가 정책과정 또는 정치과정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 특히 정책지지에 있어서 어떤 메커니즘의 영향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려는 의도였다.

2009년과 2010년 조사 자료를 통하여 정책지지에 있어서 이념적 희생이 보수성향의 집단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신뢰가 이러한 이념적 희생을 가능하게끔 하는 요인임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이념적 희생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이념지향을 갖고 있는 2009년과 2010년 자료에서만 일관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논리적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상대적으로 진보적 이념성향을 갖는 정부(2007년)에서 정부지출의 확대는 정권의 이념적 가치와 상치되지 않지만, 보수적 이념성향을 갖는 정부(2009년과 2010년)에서의 정부지출의 확대는 집권정부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상치되는 정향이다. 따라서 보수적 집권정부의 지지기반인 보수적 정치이념을 갖는 대중들의 입장에서선 정부지출의 증가는 이념적 희생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념적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친시장적 보수적 이념성향을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에게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해방이후 처음으로 진보와 보수정권의 교체를 경험하면서 정치 및 정책과정에서 이념적 정치성향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교육수준의 향상과 IT기술의 생활화로 과거와는 달리 정부역할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 개인들의 다양한 견해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표출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지지확보는 성공적 정책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 정부가 비록 친시장주의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을 표명하며 출발하였다 하더라도 동

14) 한 가지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결과가 보수적인 집단이 지출선호에 있어서 절대적인 감축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선 분석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정치적 이념성향에 상관없이 증액에 대해 우호적인 지출선호를 갖고 있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시에 중산층 및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같은 친서민적정책의 수행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 정부(비단 현정부 뿐만 아니라)는 집권정당의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정책을 펼쳐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념적으로 상치되는 정책을 포용함으로써 보다 넓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안정과 정당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한 정치적 가치이다. 그러나 집권정부가 자신들의 지지기반과 정치적 이념성향이 다른 정책을 펴고자 하는 것은 지지기반으로부터 도리어 정치적 반대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정책수행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대중들이 정부에 대해 일반적 차원에서의 신뢰 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과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나름 희생을 감수하며 지지를 표명할 수 있다는 점은 정부신뢰의 확충이 규범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책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결과가 구체적이 정책영역이 아닌 통합적인 지출증가에 대한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그 해석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념적 희생의 발생에 따른 정부신뢰의 효과를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의 발생에 따른 정부신뢰의 효과와 그 상대적 크기와의 비교 등은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다루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정부신뢰와 정책지지간의 내생성 문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쾌히 검토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정책지지가 정부지출 증가라는 다소 구체적인 개념을 이용하고 있어 보다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정책지지와는 구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신뢰와의 인과적 순환관계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현구·이승중·최도림. (2009). 정부신뢰의 지표체계 개발 및 적용: 외부신뢰와 내부신뢰의 비교분석. 「행정논총」 47(3): 1-24.
- 김신영. (2009).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사회적 신뢰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9 전기사회학대회, 561-572 쪽 (총 12 쪽).
- 류만희·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 (self-interest)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1): 191-210.
- 박순애. (2006). 정부에 대한 이해와 정부 신뢰의 관계. 「한국행정학보」 40(2): 73-97.
- 박정훈. (2008). 정부신뢰와 정책수용: 전자주민카드 정책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1): 93-122.

- 박종민. (2008). 한국인의 정부역할에 대한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2(4): 269-288.
- 배귀희·임승후. (2009).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정책선호 및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61-92.
- 서성아. (2007). 「행정에 관한 국민의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보」 39(3): 87-113.
- 이승중·강철구. (2006). 지방정부 정책결정자의 정당, 정치이념, 정책선호와의 관계.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4): 117-135.
- 이승중.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회보」 44(1): 99-119.
- 이승희·권혁용. (2009) 누가 언제 재분배 정책을 선호하는가?. 「국가전략」 15(3): 147-173.
- 이시원. (1994).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정책학회보」 3(0): 61-84.
- 이현출. (2005). 한국국민의 이념성향 : 특성과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39(2): 321-343.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007 한국복지패널기초분석보고서」
- Achen, C. (1992) Social psychology, demographic variables, and linear regression: Breaking the iron triangle in voting research, *Political Behavior*, 14(3): 195-211.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Almond, G. and S.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artels, L. (1996). Uninformed votes: Information effects in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194-230.
- _____. (2005). Homer gets a tax cut: Inequality and public policy in the American mind. *Perspectives on Politics* 3(01): 15-31.
- Chanley, V., T. Rudolph, et al. (2000). The origins and consequences of public trust in government: A time series analysis. *Public Opinion Quarterly* 64(3): 239.
- Chong, D., J. Citrin, et al. (2001). When self-interest matters. *Political Psychology* 22(3): 541-570.
- Citrin, J. (1974). Comment: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73-988.
- _____. (1979). Do People Want Something for Nothing: Public Opinion on Taxes and Government Spending. *National Tax Journal* 32(2): 113s-29s.
- Citrin, J. and D. Green (1986). Presidential leadership and the resurgence of trust in governmen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04): 431-453.
- _____. (1990). The self-interest motive in American public opinion. *Research in Micropolitics* 3:1-28 .
- Crowe, J. and W. Bailey (1995). Self-interest and attitudes about legislation controlling alcohol. *Psychological reports* 76: 995-995.
- Dahl, R. (1956). *A preface to democratic theo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ixon, R., R. Lowery, et al. (1991). Self-interest and public opinion toward smoking polic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Public Opinion Quarterly* 55(2): 241.
- Easton, D.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4): 435-457.
- Eismeier, T. (1982). Public preferences about government spending: Partisan, social, and attitudinal sources of policy differences. *Political Behavior* 4(2): 133-145.
- Elliott, E., B. Seldon, et al. (1997). Political and Economic Determinants of Individuals' Support for Environmental Spending. *Journ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51(1): 15-27.
- Erikson, R., M. MacKuen, et al. (2002). *The macro polity*. Cambridge, Cambridge.
- Evans, A. (1992). Black middle classes: The outlook of a new gene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s, Culture, and Society* 6(2): 211-228.
- Gamson, W. (1968). *Power and discontent*, Dorsey Press.
- Gilens, M. (2001). Political ignorance and collective policy preferenc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02): 379-396.
- Goggin, M., A. Bowman, et al. (1990). *Implementation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third generation*, Harper Collins.
- Green, D. and A. Gerken (1989). Self-interest and public opinion toward smoking restrictions and cigarette taxes. *Public Opinion Quarterly* 53(1): 1.
- Hetherington, M. (1998). The political relevance of political trus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4): 791-808.
- Hetherington, M. and S. Globetti (2002). Political trust and racial policy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2): 253-275.
- Hetherington, M. (2005). *Why trust matters: Declining political trust and the demise of American liber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uckfeldt, R., J. Levine, et al. (1999). Accessibility and the political utility of partisan and ideological orient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3): 888-911.
- Hibbing, J. and E. Theiss-Morse (1995). *Congress as public enemy: Public attitudes toward American political institutions*, Cambridge Univ Pr.
- _____. (2001). *What is it about government that Americans dislike?*, Cambridge Univ Pr.
- Huseby, B. (1998). Attitudes Towards the Size of Government. *The scope of government* 1(9): 87-120.
- Jacoby, W. (1994). Public attitudes toward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2): 336-361.
- _____. (2000). Issue framing and public opinion on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750-767.
- King, D. (1997).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arties and mistrust of government. In Nye, S. J., Zelikow, P.

- D., & King, D. C. (eds.).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Krosnick, J. (1988). The role of attitude importance in social evaluation: A study of policy preferences, presidential candidate evaluations, and vo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2): 196-210.
- _____. (1991). The stability of political preferences: Comparisons of symbolic and nonsymbolic attitud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5(3): 547-576.
- Lupia, A., A. Levine, et al. (2007). Were Bush Tax Cut Supporters "Simply Ignorant?" A Second Look at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 "Homer Gets a Tax Cut". *Perspectives on Politics* 5(04): 773-784.
- Miller, A. (1974).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 _____. (1974b). "Rejoinder to" Comment" by Jack Citrin: Political Discontent or Ritualism?"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89-1001.
- Nye, S. J., Zelikow, P. D., & King, D. C.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Pennock, J. (1979). *Democratic political theo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 (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65.
- Rhodebeck, L. (1993). The politics of greed? Political preferences among the elderly. *The Journal of Politics* 55(02): 342-364.
- Riggle, E., V. Ottati, et al. (1992). Bases of political judgments: The role of stereotypic and nonstereotypic information. *Political Behavior* 14(1): 67-87.
- Rudolph, T. and J. Evans (2005).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3): 660-671.
- Rudolph, T. (2009). Political Trust, Ideology, and Public Support for Tax Cuts. *Public Opinion Quarterly* 73(1): 144.
- Sears, D., C. Hensler, et al. (1979). Whites' Opposition to Busing: Self-Interest or Symbolic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2): 369-384.
- Sears, D., R. Lau, et al. (1980). Self-interest vs. symbolic politics in policy attitudes and presidential voting.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670-684.
- Sears, D. and J. Citrin (1982). *Tax revolt: Something for nothing in California*, Harvard Univ Press.
- Sears, D. (1983). The persistence of early political predispositions: The roles of attitude object and life stage.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79-116.
- Sears, D. and C. Funk (1991). The role of self-interest in social and political attitude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1): 91.
- Scholz, J. and M. Lubell (1998). Adaptive political attitudes: Duty, trust, and fear as monitors of tax policy.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2(3): 903-920.
- Stokes, D. (1962). Popular evaluations of government: an empirical assessment. *Ethics and Bigness: Scientific, Academic, Religious, Political, and Military*: 61-72.
- Weatherford, M. (1987). How does government performance influence political support? *Political Behavior* 9(1): 5-28.
- Wilson, J. (1995). *Political organizations*, Princeton University Pr.
- Wolpert, R. and J. Gimpel (1998). Self-interest, symbolic politics, and public attitudes toward gun control. *Political Behavior* 20(3): 241-262.

ABSTRACT

Ideology, Political Trust and Policy Support

Hyunsub Kum & Seungju Baek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deology, political trust, and public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Based on the sacrifice theory originated by Heatherington (2005) and Rudolph and Evans (2005), it was hypothesized that there is ideological sacrifice spurred by political trust in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Consistent with the theory,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s of political trust are significantly more pronounced among conservatives than among liberals, which means the effect of ideology on support for government spending is moderated by political trust. This finding suggests that political trust has a normative importance as well as practical consequences in understanding the policy process.

【Key Words : Policy Preference (Policy Support), Political Trust, Sacrifice Theory】